홍장표 "일부 언론 악위적 보도 엄벌"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 언론 기자 경찰에 고발

홍장표 당협위원장은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마타도어식 허위보도에 대해 경찰에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홍장표(국민의힘,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은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마타도어식 허위보도에 대해 경찰에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S 일보와 T 인터넷신문 기자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최근 S 일보와 T 인터넷신문이 홍 위원장 부인의 토지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부의 의혹을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특히 S 일보 A 기자는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안산시민 다수가 참여해 소통하고 있는 SNS 채팅방에 퍼 나르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S 일보는 의혹 차원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 짓고 기자 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정정보도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이어 T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22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1차 보도에 대해 즉시 정정을 요구하자 전혀 다른 내용으로 2차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도 매체 자체에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려놓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발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고발장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고발한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사자나 해당 관공서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 상호 공조한 흔적마저도 의심돼 경찰과 검찰에 엄정하고 정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두 언론사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끝까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의회 단신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 원안 가결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동두천시의회는 22~24일 3일간 진행된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성대 기자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 수상

이진연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민주당, 부천7) 의원은 23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 주최하는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大賞)'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저출생 및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을 보장하고 일·가정·생활의 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힘써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공동발의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기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중심의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이 이제는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우수한 여성인적자원 저활용에 대한 통합적 대응 차원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모든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요건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인창 기자

미인가 교육시설 관계자와 소통 간담회

서정호 인천시의회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교육질 높인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지역 2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공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향후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인친시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훈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윤재환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담당 팀장, 전경아 초등대안 얼음학교장 및 대안학교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대안학교의 상생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주요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구체화, 등록운영위원회 참여율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관련 등록기준, 교원자격의 합리화, 교육시설 안전기준 매뉴얼 마련 등이다.

전경아 교장은 "교육자치 학생자치 시대를 맞아 대안교육기관도 공식학교로 인정돼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환 시교육청 과장은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 교사모집, 학습권 향상, 시설안전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 시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안종삼 기자

지자체혁신평가 '최우수상' 수상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WFPL 7대 지자체혁신평가대상' 최종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7대 지자체혁신평가대상' 최종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제안 등의 지표로 구성된 WF 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심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 의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 의원 및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외에도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파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환경조성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의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의정혁신평가에서 지자체 경쟁력 확보와 파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돼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포천시의회 독립적 인사 운영 인사위원 7명 임명·위촉

포천시의회는 24일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해 '포천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을 임명·위촉했다. 포천시의회 인사위원회는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을 수행한다.

손세화 의장은 "포천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

대장지구 준공 지연… 보상금 검토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입주민 민원 해결에 '앞장'

23일 판교 대장지구 준공을 위한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3차 총괄 회의가 성남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에는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과 부시장을 비롯한 각 사업부서, 대장지구 각 단지 입주자대표 그리고 성남의 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단지 주민대표들은 서판교IC 밑 하류 쪽 도로 확장, 옹벽부 미관 개선, 생태수로 시험 가동 참관 및 조기 물 공급, 송전탑 이행 명령 관련 성남시의 적극 행정, 공원 및 녹지에 다양한 수종 식재, 응달산 등산로 개설, 중앙광장 그늘막 추가 설치 등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23일 판교 대장지구 준공을 위한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3차 총괄 회의가 성남시청에서 개최됐다.

최현백 의원은 "지난해 11월9일 2차 총괄 회의 당시 사업부서별로 준공을 위해 인계인수 목록 작성과 사전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입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세밀한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조속한 자료 제출과 준공 지연에 대한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지체보상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현대 엘포레 3·4단지의 공개공지 재검토, 포스코 11·12단지의 상수도 녹물 현상, 두밀사거리 주변 단지의 문주 개선과 LED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남시는 입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민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장지구의 준공 관련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다양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무 기자

여의도 소식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 3인

김영배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민주당, 서울성북갑·**사진**) 의원은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제26조제2항),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26조제4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6명으로 김영배·김성환·김원이·김종민·백혜련·신동근·오기형·윤호중·이수진·이용우·이정문·이탄희·정춘숙·정필모·최기상·허종식 의원이다.

이민봉 기자

"백신패스 유지 의의 없다"

최춘식 의원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사진**) 의원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명분·정당성·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학 기자

"매음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배준영 의원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사진**) 의원이 강화군 매음지구가 300억원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음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농촌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농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매음지구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배 의원은 지난해 말 기본조사를 완료한 매음지구에 대해 올해 초 신규착수지구에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된 매음지구는 총 사업비 295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며 저류지 2개소 준설과 양수장 2개소 및 배수로 확장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매음지구는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향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음지구 사업을 통해 강화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촌 용수 확보를 비롯해 관개·영농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매음지구 사업이 세부설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안종삼 기자